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457
----------	-----

발의연월일 : 2009. 3. 6.

발 의 자 : 김인식 의원외 5인

1. 제안이유

최근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다문화가족 전담민원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합 의 :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2. 한국문화·사회적응 교육과 직업훈련 실시
3. 상담, 종합생활안내 및 정보 제공
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보건,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
6.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3. 다문화가족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다문화가족 전담민원상담창구) 시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외국어로 민원처리절차 안내 및 상담 등을 위한 전담민원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찬 성 의 원 서 명

[illegible]